

‘기아차 채용 사기’ 브레이크가 없다

“사무직 1억·생산직 5000만원” 골프강사가 3명에 돈 챙겨 지난 1월에도 전직 노조간부 수사 등 잇을만하면 또 터져

잇을 만 하면 되풀이되는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기아자동차 채용 사기 연루자가 모 자치단체 고위간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간부까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합평경찰은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며, 최근 자치단체 고위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골프강사인 A씨가 “1억원을 주면 사무직, 5000만 원을 주면 기아차 생산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명

으로부터 각각 3000만~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모 자치단체 고위 간부를 통해 기아차에 채용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속아 9000여만 원을 건넨 B씨는 실제 채용이 되지 않자 최근 A씨로부터 돈의 일부만 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A씨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모 자치단체 간부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간부와 A씨는 지난

2014년 이후 두 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평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간부를 거론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해당 간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라면서 “일단 A씨가 해당 간부와 친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확인됐으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간부의 채용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A씨와 1~2차례 만난 것 외엔 밝혀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해당 간부도 “A씨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있으나 이번 기아차

채용 사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내 직분이 사기업의 직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아차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광주의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고 빈틈난 직장조차 찾기 힘들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채용을 청탁하고, 이를 악용해 돈을 챙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에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가 수억원의 취업 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4년 기아차 노조 간부와 직원 등 130여 명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으로 흥역을 치르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0년 이전 판매 대진침대서도 고농도 라돈 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 밝혀 교체한 침대서도 검출

정부 발표와는 달리 2010년 전에 대진침대가 판매한 제품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8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라돈 침대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단체 ‘태양의학교’와 조사한 결과, 2010년 이전 판매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에 거주하는 대진침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2007년 구매했다는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에 대해 방사능을 측정했다. 센터는 “방사능 측정기 ‘인스펙터’로 측정했는데, 해당 제품에서는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며 “이는 연간 피폭 기준 1밀리시버트의 6.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실내 라돈 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해보니 라돈이 254벵크렐 나와 안전기준(148벵크렐)의 1.7배에 달했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문제가 생겨 교체한 침대에서도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대진침대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대진침대 매트리스 ‘네오그린헬스’를 회수한 뒤 이달 제조돼 안전하다는 ‘모젤’로 교체했다”며 “하지만 새 매트리스에서도 안전기준의 6배가 넘는 932벵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침대 사용자는 원안위에 이 내용을 알렸고, 현재 문제의 ‘모젤’ 매트리스는 원안위가 측정 시험을 위해 인수해 간 상태다.

이처럼 라돈 침대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센터는 안전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센터는 “미량이라도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구매·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며 “당분간 집에서 보관할 수밖에 없을 때는 큰 비닐로 겹겹이 싸줘야 하고, 버릴 때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라돈 침대 사용·피해 신고전화(02-741-2070)도 개설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최저임금법 반발 총파업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 도로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집단폭행’ 5명 특수상해죄 등 기소

검찰, 살인미수죄 적용 안해

검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수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흉기로 사용된 낫가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고, 박씨가 돌을 들었으나 A씨를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에 내리친 것으로 볼 때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들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형법상 상해죄(7년 이하 징역)에서 형량을 2분의 1가중한다.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이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준 죄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돌을 내리친 것은 ‘가격할 생각은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박씨가 주장하고, 범행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인 과시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가담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담자 일부의 폭력조직 가담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육상 빨랫줄 잡고 원룸 침입...여성 상대 강도 30대 구속

혼자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원룸에 침입해 혼자사는 여성을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 30대 여성 A씨를 위협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당일 새벽 0시 56분께 범행 장소인 3층 원룸 옥상에 올라 3시간여동안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빨랫줄을 붙잡고 창문을 통해 A씨의 3층 주택으로 침입한 박씨는 자고 있던 A씨의 얼굴과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협박한 뒤 체크카드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후 다시 A씨의 집으로 들어가 박씨는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재차 협박하고 A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다.

경찰은 3일 동안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사채 등을 썼는데, 400여만원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페지 팔아 생계 잇던 70대, 석탄일 사찰서 시주금 훔쳤다 ‘털미’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오던 70대 노인이 ‘부처님 오신날’ 사찰에서 연등 시주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털리.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78)씨는 ‘석가탄신일’인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사찰 입구 접수대에서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연등 시주금으로 내놓은 80여만원을 꺼내갔다는 것.

○...사찰 인근 아랫마을에서 살던 이씨는 이날 사찰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의 가방까지 뒤지는 등 주변을 오랫동안 배회한 사실이 CC-TV 확인결과 드러났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접수대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욕심이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지매증상이 있어 어디에 돈 봉투를 놔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